

『사회과학연구논총』 연구윤리 규정

2007.6.1. 제정
2008. 3. 10. 부분개정
2015. 6. 3. 부분개정
2017. 4. 12. 부분개정
2017. 8. 23. 부분개정
2019. 7. 1. 전면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자(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연구윤리위원회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진작하고,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윤리와 의무)

- ① 연구자는 다음 각 호가 정한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날조하는 ‘위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재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타인의 논문이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에 대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둘 이상의 학회지에 ‘중복게재’를 해서는 안 된다.
 5. 동일한 논문을 둘 이상의 학회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중복투고’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구내용 및 결과에 참여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분석,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 ③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논문 투고시 이를 밝혀야 한다.
- ⑤ 연구자는 자신의 현재 소속과 직위 등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⑥ 학위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투고하는 경우 투고 논문이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 ⑦ 연구자가 연구위탁기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투고하는 경우 위탁기관과의 협약서 혹은 계약서에 포함된 연구결과물의 사용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연구위탁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 ⑧ 연구자는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 연구윤리교육이수증 및 KCI문헌유사도검사 결과를 논문투고시 제출해야 한다.
- ⑨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편집위원의 윤리와 의무)

- ① 편집위원은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고 논문의 심사과정, 편집과정 및 게재 여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또 다른 전문가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은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을 벗어나서 모든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 ④ 편집위원은 심사과정과 그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심사위원의 윤리와 의무)

-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 편집위원회에 지체하지 않고 통보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을 벗어나서 학문적 객관성에 입각,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개인적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과정과 그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학술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이 규정에 위반되는 투고자 및 연구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이화사회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5인 내외의 위원은 위원장인 이화사회과학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 ① 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에 따른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④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⑦ 해당위원이 피조사자의 신분일 경우에는 해당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위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 8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① 연구논문의 출판 이전에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1. 위반행위가 명백할 경우 심사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연구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2.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조사를 실시한다.
- ② 이미 출판된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 ③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위원회에서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 ④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이를 인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예비조사 결과 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연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⑤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위원회는 부정행위 의혹을 제보한 자 그리고 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연구자 모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의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⑥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의혹을 제보한 자 그리고 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⑦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⑧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해당권호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관련 학술기관에 통보한다.
 -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들)은 이후 본 학회지의 논문 투고를 5년 동안 금지한다.
 - 3.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이화사회과학원의 판정결과 및 제재 조치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다.
 - 4. 이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다.
- ⑨ 위원회는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단 조사결과는 판정이 끝난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조사과정에 참여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⑩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제소된 경우라도 부정행위로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⑪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 9조(연구윤리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0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